

② 한국 영재교육, 어디까지 왔으며 무엇이 문제인가

영재교육 도입 5년 양적 · 질적성과 긍정적

글 | 김미숙 _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센터소장 meek@kedi.re.kr

영재교육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 2003년부터 공교육의 일환으로 영재교육이 실시된지 이제 5년이 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육청 또는 일선학교 산하 영재교실과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센터에서 과학영재교육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이 산발적으로 제공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영재교육진흥법이 2002년 발효되고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2007)에 의거하여 법과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어 실시된 해를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의 시작이라고 보았을 때 지난 5년 간을 '영재교육의 도입기'로 볼 수 있다.

2003년 영재교육 도입, 법적·제도적 체계 갖춰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영재교육이 제도권 교육에 도입된 시기로서 정책 추진목표였던 영재교육대상자 약 4만 명(0.5%), 영재교육 기관 500여 개 설립, 영재교사 8천 명 이상 연수, 교수학습 자료 150여 종 개발 등 각종 양적 지표가 모두 차질 없이 초과 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수요자 만족도를 통해 나타난 질적 지표에서도 영재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 학교교육 만족도인 60%를 훨씬 상회하는 약 72%를 보임으로써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는 영재교육의 후발주자이지만 확고한 법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하기도 한다. 또한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해 2002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영재교육연구원을 지정하여 영재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적 연구기반 체계를 갖추었다.

그 동안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원은 기초·정책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연구와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영재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발도구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사 연수, 영재교육기관 평가, 국제 심포지엄 개최,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계망 운영, 영재교육의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 발간 등 다양한 비영리 사업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관리자 등 영재교육 주체들을 지원하고 현장을 혁신함으로써, 명실공히 연구-정책-실천이 유기적으로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유관기관인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등의 해당 분야 영재교육 연구 및 지원을 권장하고 국가의 역량을 결집시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계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자들 간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 영재교육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명문대 진학수단으로 외국 부작용

올해 2008년은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이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정부에서는 이 새로운 향후 5년 간의 시기를 '영재교육의 발전기'로 명명하고 있다. 이 발전 시기의 핵심 정책 주안점으로서 정부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와 영재교육의 질 제고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기회 확대, 양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제도 정비, 그리고 영재교

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평가와 컨설팅 강화 등 각종 진흥 방안을 수립해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영재교육 확대 정책에 따른 시급한 현안으로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첫째는 영재교육기관 입학에 위한 사교육의 증가이다. 둘째는 늘어난 영재교육대상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충분하고 준비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확보이고, 셋째는 소외 계층에게도 공정한 영재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시스템의 정비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영재교육이 도입되면서 얻은 성과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영재성을 보이는 우수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빠른 속도로 증폭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 영재교육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영재교육이 이미 학부모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입시교육으로 왜곡 활용되는 징조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영재교육기관 입학 목적이 영재의 잠재력 계발이라는 영재교육의 본래 취지보다는 특목고나 명문대 진학 수단으로 손쉽게 변질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이 입시에 활용되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는 영재교육기관 입학에 준비시켜주는 사교육이 급증한 현실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영재성은 훈련이나 인위적인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사교육비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 정말 타고난 영재성이 있지만 선발에서 배제된 아까운 영재들이 생겨날 수 있으며, 국가 영재교육 정책은 그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과 상황은 현재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이 지나치게 지필검사 점수에 의존해 있는 점과 검사의 내용과 난이도가 수학과 과학 등 특정 교과에서 높은 성취수준을 요구함으로써 선행학습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점에 의해 더욱 촉발되고 있다.

둘째,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른 이들을 지도할 우수교원 확보의 문제이다. 영재들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는 해당 교과의 고등 수준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뿐 아니라, 교육과정을 압축 또는 변형할 수 있는 능력, 영재의 학습양식에 맞추어 교실수업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 영재에게 보다 도전적인 내용의 쓰기나 읽기 과제 할당, 개별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 자기주도적 학습과 의사결정의 기회 제공, 열린 사고와 문제해결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교수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과학교사인 경우, 학습 개념의 강조, 고차원적 사고 강조, 탐구학습의 강조(특히 문제해결

학습), 학생-교사의 상호작용을 돕는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ICT의 이용 강조(인터넷, 이메일 등), 틀에 박힌 실험학습을 지양한 과학적 방법과 실험 사용의 강조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동안도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확보와 전문성 신장은 영재교육의 성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현재까지 우수교원 유치와 유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규 학교수업 외 추가수업에 따른 수당 지급이나 국내 직무연수나 해외 연수기회 부여, 매우 제한적인 일부 교육청에서 승진이나 전보 가산점 제공 등의 사기진작 방안이 고작이다. 따라서 영재들을 지도한다는 열정과 보람에 의해 출발하였다고 해도 2~3년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영재교육 연수를 받은 많은 영재교육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질 높은 연수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이들이 영재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활동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소외계층에도 영재교육 기회 보장돼야

셋째,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기회가 시스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될 기회가 불리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쿼터 형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되는 것이 차단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영재성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사회·경제적 계층과 무관하나 영재성 발현 여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매우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취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지필고사 중심의 선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선발기준에서 학생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숙련된 교사의 추천이 보다 힘을 받도록 해야 하고, 타고난 잠재력이 있으나 '지원이 없으면 성취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우선적인 선발대상자로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교육을 통해 이미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나 영재교육기관 입학에 준비해온 학생들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

실제 교육 실천 단계에서도 소외계층의 미성취 영재들의 특별한 사회·정서적 필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되어야 한다.



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제15회 제주학생과학탐구올림픽 과학탐구실험대회'에서 중등부 참가자들이 실험계획을 세우고 있다(2007년 7월 7일, 사진제공=연합뉴스).

미성취 요인이 될 수 있는 삶과 미래에 대한 절망, 학습에 대한 동기 부족, 정신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특별한 이해와 배려가 프로그램의 내용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위한 멘토십 및 상담 제공, 장학금 혜택 등의 심리적·경제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영재교육이 학교 안에서 뿌리내리게 해야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향후 5년 간의 발전기를 거쳐 다음 5년(2013~2017)의 시기를 '영재교육의 정착기'로 명명하고 있다. 영재교육이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학교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 교육대상자인 영재들은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재교육의 정착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중장기 과제는 영재교육이 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유리되어 제공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개선이다.

주말이나 방과 후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의 별도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만으로는 여전히 영재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학교 수업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는 영재교육의 기회를 전체학생의 1% 이상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우며 선진국 수준인 5~15% 수준으로 확대할 수가 없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영재들이 주로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이다.

영재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1995년 교육개혁 대통령보고서에서도 영재교육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정규학교 내의 영재교육과 다른 하나는 별도 영재교육 기관을 통한 영재교육의 활성화이다. 그 동안 한국의 영재교육은 전자의 방법보다는 보다 접근하기가 쉬운 후자의 방법을 통해 실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영재교육이 제공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에서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은 기본교육과정을 영재의 수준과 능력에 맞게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의 대표적인 방법이 심화와 속진이다. 심화는 당해 학년의 공부하고 있는 주제를 좀 더 상세하게 탐색하게 하고 그와 관련해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더해나가는 일종의 정교화 전략으로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탐구주제에 대해 추가조사 기회 부여, 관련 연구기관 방문 및 전문가 면담 기회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능력별 집단 구성을 통해 차별화된 학습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며 기본 학교 교육과정 내용에 사고와 지식의 깊이와 복잡성 부여, 새로운 관점 장려, 난이도 심화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능력별 집단편성은 과목별로 상시 또는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사한 흥미와 능력을 보이는 영재를 중심으로 동질집단을 구성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함이다.

한편 속진은 당해 학년의 교과내용을 우수한 성적으로 숙달한 학생들에게 더욱 수준이 높은 상급학년의 교과내용을 배우게 해주므로써 정해진 교육과정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차별화 방법이다. 이는 교사나 튜터의 기본교육과정 압축을 통한 개인지도, 특정 과목의 일반(조기진급, 조기졸업), AP 제도, 대학과의 이중등록제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위에서 설명한대로 일반학교에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한편, 특히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과학 등 특수 분야에 한해 이에 영재학교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과학영재교육은 일반학교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실험실습 등의 기자재와 시설이 필요하고 모든 일반 교사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보다 전문적인 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줄 과학영재학교나 과학고 등의 특수학교가 설치될 필요성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얻는다. 현재 과학영재학교 1곳, 과학고 19곳 등 총 20곳의 과학영재(약 4천 명, 전체 고교생의 0.22%)를 위한 특수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두 학교 유형 간의 기대되는 과학영재 양성 기능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서로 달라 이를 영재교육진흥법으로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

즉 영재학교의 확대는 기존 과학고의 전환으로 인한 확대로서 과학고의 영재교육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영재학교로 전환되기를 희망하는 과학고는 영재학교의 요건을 갖추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환, 지정될 수 있게 한다. 과학영재 양성의 설립취지 달성에 유리한 교육과정의 융통성 부여, 우수교원 확보 가능성 제고, 과학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 및 예산 확보 등의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이들 학교 안에서 내실 있는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용 다양화해야

두 번째 중장기 과제로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영재교육은 영재성의 출현 영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과학 영역에 80% 이상 편중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양한 필요를 가진 영재학생을 위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과학기술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양성되어야 국가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수학과 과학 교과만이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고등 인지사고능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등의 토양이 되는 언어, 역사, 철학, 외국어 등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심미능력이 함

께 배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재들의 미래의 창의적 성취와 성공,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이끌어주는 진로 비전과 목표의식, 동기, 타인과의 관계 맺음 등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을 돕는 인성 및 리더십 교육이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사회기여에 이르는 글로벌 인재가 효과적으로 양성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너무 지나치게 분야별로 세분화된 영재교육을 탈피하여 초·중등 저학년 단계에서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리더십을 증진시켜 주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고 언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모든 학문에 기초가 되는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접근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이공계 및 인문사회, 예술, 리더십 등 통합적 영재교육 제공 방안 모색은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정부의 영재교육 확대 정책에 균형감과 성공적 이행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세 번째 중장기 과제는 영재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및 강화이다. 중앙 부처와 시·도교육청, 대학, 학회, 학부모 단체, 더 나아가 해외 영재교육 관계기관 등과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교육과학기술부의 탄생과 함께 대학과 시·도교육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과학영재교육을 일원화하고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 영재교육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과 과학영재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및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16개 시·도교육청의 담당 장학사·장학관 협의체와 25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전국 협의체가 이미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들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두 협의체 간 정례 회의를 추진해 볼 수 있다.

또한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670여 개의 영재교육기관을 학교급과 지역별로 특성화시켜 다양한 모습의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KEDI 영재교육연구원,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등의 연구원 간의 영재교육 DB 구축 및 정보교환, 공동 연구개발,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연계 협력이 활성화되어 국가 영재교육 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㉔



글쓴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영재교육연구원 원장,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 한국영재교육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한태평양국제교육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